금속노조통신 156호

■발행일 : 2019년 6월 24일(월) ■발행인 : 김호규 ■발행처 : 노조산전홍보실 ■스마트폰 m.ilabor.org / ■전화 : 02-2670-9507

“문재인 정부, 노동운동에 선전포고”

김명환 총연맹 위원장 구속 대응투쟁 계획 발표 … 7월 3일 공공 비정규직 총파업, 18일 전국 총파업 벌인다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일상사업을 축소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7월 18일 전국 총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6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 구속 동지 석방,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임원들과 가맹 산하 조직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노조가 없는 열악한 노동자를 위해 투쟁한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친재벌 반노동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민주노총에 선전포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재벌처럼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그저 지금의 법과 상식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자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권이 재벌 존중 정책을 위해 노동자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노동법 개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역사를 거스르는 정세를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의 정신을 배신한 정치보복이자 배반 행위다”라고 규정했다. 단병호 지도위원은 “문재인 정권은 노동과 자본 간의 사회구조 모순 해결을 위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며 “비정규직 차별은 그대로이고, ILO 핵심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올리는 척하더니 탄력근로제로 그나마 무위로 돌아갔다”라고 지적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열악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민주노총 탄압에 나섰다”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시민사회의 모든 세력을 규합해 25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가열찬 투쟁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6월 22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구속 상황에 따른 조직의 대응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6월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투쟁, 7월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대회까지 투쟁일정을 발표했다.

“정리해고 수갑 풀었지만, 국가폭력 수갑 그대로”

쌍용차 복직 노동자 기자회견 … 국가·자본 100억 손배 소송 계속, “아직 투명 철창에…”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이 10년째 끝나지 않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이 제기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가압류에 발목이 잡힌 채 10년 전 잔인했던 국가폭력 현장에 아직도 갇혀 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6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국가폭력 10년,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즉각 철회 쌍용차 복직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쌍용자동차노조 간부들이 함께했다.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해 8월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 파업 강제진압 당시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경찰은 위원회가 권고한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국가가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제압하는 무기로 악용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철회하지 않는 한 2009년부터 시작한 국가폭력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규탄했다. 지부는 경찰이 국가 손해배상·가압류 가운데 일부를 풀었지만, 현재 복직 노동자 한 명과 미복직 노동자 열세 명의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 4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9월 노·노·사 합의로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조합원들은 “정리해고 수갑은 풀렸지만, 국가폭력 수갑은 그대로이다”라며 손해배상·가압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1월 복직한 김정욱 지부 사무국장은 “국가폭력을 직접 자행한 경기지방경찰청은 아직도 노동자를 범법자로 규정한 쌍용차 진압 백서를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진압 백서를 놔두고 국가폭력으로 다치고 죽어간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복직한 채희국 조합원과 오는 7월 1일 복직을 앞둔 강환주 조합원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투명한 철창에 갇혀 있고, 가정의 빚은 계속 불어난다. 국가와 자본은 자신이 동원한 폭력 수단에 관한 비용을 노동자에게 갚으라고 한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행사했는데,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가 헌법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장석우 변호사는 “경찰은 진압 장비로 사용한 헬기와 크레인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조사위에서는 헬기와 크레인 사용이 공권력 사용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 사용 규정(대통령령)을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라며 손해배상 청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차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지부는 올해 들어 이미 네 차례 경찰청장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매번 거부하고 있다. 지부는 복직한 조합원들이 6월 24일부터 경찰청 앞에서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파업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손해를 입었다며 16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6년 법원은 2심 판결에서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11억 6,76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지연이자를 포함해 24억 원의 국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쌍용차 자본이 노조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도 1심에서 33억 1,140만 원 배상 판결이 났다.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 손해배상금액은 76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 오는 8월 2심 재판을 연다.